

시선

사설

무계감 사라진 제 52대 학생회 총선거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 제 52대 학생회 총선거가 마무리됐다. 양 캠퍼스 모두 경선이었던 만큼 치열한 선거 운동 기간을 거쳐 2020년의 학생 자치를 끌어갈 대표자를 학생 손으로 무사히 선출했다.

결과 는 나왔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무사하지 못했다. 그 과정을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이번 선거 과정에 양 캠퍼스에서 발생한 논란은 썩 좋지 못한 뒷맛을 남겼다. 먼저 국제캠에서는 지난달 20일, 선거 기간 중 외국어대학(외대)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장)이 해임됐다. 외대 선관위장이 선거준비기간 중 특정 선본 및 후보자를 지지하고, 선거 개입 및 유착 관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의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가장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도록 힘써야 할 선관위장의 해임 그리고 그 사유가 선거 개입 및 유착 관계 정황의 포착이란 점은 그 자체로 실망감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또한 해임 이후 어떠한 입장도 없었다는 점도 구성원의 실망감을 더했다. 선관위장이 갖는 직책의 책임감을 충분히 느꼈다면 중립을 위해 몇 번이고 신중하게 고민했어야 할 이 틀림없다.

서울캠에서는 선본 간 공약 취득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출마가 무산된 한 선본의 참모가 타 선본으로 소속을 변경하며 기존 선본 공약집을 공유한 것이다. 정황을 살펴보면 소속을 변경할 때 공약집도 함께 가져오라던 한 선본원의 농담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농담으로 해야 할 말과 그러지 않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한 선본원이 한 해 동안 학생 자치를 이끌어갈 선거의

무계감을 느꼈을 리 만무하다. 심지어 공약집이 공유된 이후에도 공약을 받은 선본의 출마자조차 이를 확인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선거에 대한 무계감 부재가 단지 일부 인원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까지도 민주적으로 총장을 선출 하겠다며 목소리를 내던 학내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번 학생회 총선거 과정은 아쉬움을 더할 뿐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며 신뢰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대표자를 뽑는 절차다. 소단위인 학생 자치조차 구성원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논란과 잡음이 이어진다면 학생 대표자에게 목소리를 전달해 이어나가야 할 추후 총장 후보 선출 선거까지 불안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최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는 범민주파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 결과 분쟁 속 시위를 강하게 진압하던 홍콩정부의 강경 기조는 일부나마 완화될 수 있었다. 대표자를 뽑는다는 건 국제관계의 흐름까지 좌우할 정도로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과정이다. 그 단위가 대학의 학생 자치로 좁혀진다고 할지라도 조직을 끌어갈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본질과 중요성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잡음 없는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의 무계감을 간과하지 말고 2020년 11월에 진행될 제 53대 학생회 총선거부터라도, 혹은 2020년 3월에 진행될 재보궐 선거에서라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평 - 경희특 설치율 저조 및 홍보 부족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2)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숙 | 편집장 이훈수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외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역삼로 1732(서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언제까지 법은 아이의 이름이어야 하나

세시봉

이서림 <국제뉴스팀장>



수년째 우리 사회에 표류하고 있는 이름 여러 개가 있다. 그리고 최근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인터넷에 등장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 이름은 ‘김민식’이다. 이 아이는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 하늘로 떠났다고 한다. 이전에는 하준, 해인, 한음, 태호, 유찬이가 있었다. 관련한 법이 3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사진 주차장의 차량이 추락하면서, 응급조치가 늦어져서, 동승자의 방치로 인해, 법이 규정한 정식통학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등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다. 심지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안전을 위협받았다. 사고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은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 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처럼 가슴 아픈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하다.

여러 사고로 발의된 개정안은 어린이 응급처치 의무화, 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 차량 정지, 어린이 차량 관리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의무화 등 대체로 기본적인 내용이다. 기본적인 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 아쉬울 뿐이다. 이에 지난 27일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이 대통령 지시 한 마디에 국회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부모들이 거리에 나서 청원했던 3년간의 시간이 무색해질 만큼 빠른 결정이었다. 연이어 28일 행안위에서 ‘어린이 안전기본법 제정안’(해인이법), 도로교통법 개정(태호·유찬이법)의 일부 내용이 의결됐고 당초 29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필리버스터가 신청됐다. 한 정당 대표는 현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조건으로 달았고 여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자 본회의는 무산됐다. 치열히 다투는 틈에 민생 법안 입법은 요원해졌다. 본회의에 상정되기로 한 안건 의결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 상태며 이외의 일부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이다.

더욱이 한 국회의원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지난 28일 유가족의 질문에 이 국회의원은 “법 하나 만든다고 해서 사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도 법이지만 모든 국민과 어린이들이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

했다. 물론 법 하나가 모든 사고로부터 국민을 온전히 보호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강제할 힘이 있다.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위험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끔찍한 사고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여태껏 발생했던 사고는 아이들이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던 사고가 아니었다.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린이법을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이용하거나 안일한 태도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여태껏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해 온 주체는 부모였다. 언제까지 부모가 나서서 자식의 이름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가. 현재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다른 이름은 여러 가지다. 그동안 많은 사례를 단순히 교통사고로 치부하고 수칙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던 탓에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이름은 늘어만 갔다. 제도가 미비한 현 상황을 미온적으로 바라보고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또한 아이들의 이름이 정치에 쓰여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 법안의 이름이 늘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국민의 안전을, 특히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기를 바란다.

대학평가, 무시하기에도 주목하기에도

취재수첩

김수혁 기자  
sherko@khu.ac.kr



얼마 앞서 언론사 대학평가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내용의 기사를 발행한 바 있다. 그 기사에는 “평가순위 상승했다고 경마식 보도를 냈던 대학주보가 이런 기사를?”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타당한 지적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언론사 대학평가를 비판하는 다른 기사가 나오고 그 앞에는 또다시 순위평가 결과를 알리는 기사가 나온다.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한 이런 미묘한 태도는 비단 우리 신문만의 일은 아닌 모양이다. 순위평가 관리업무 담당 부처의 관계자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을 막론하고 언론사 대학평가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해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비판이 쏟아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이나 조정을 위해 개별 부서나 단과대에 협조를 요청할 때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 설득이 훨씬 수월해진다고도 말했다.

사실 얼마나 매력적인가. 전국의 주

요 대학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렬로 줄 세워 알려준다니. 한눈에 보기 쉽고, 무엇보다 재미있다. 눈만 돌리면 어디서나 이리저리 늘어선 줄을 볼 수 있다. 공부 잘 한 학생 순위, 많이 들은 노래 순위, 많이 본 영화 순위, 많이 읽은 책 순위, 게임 점수 높은 순위, 심지어 인기 있는 아기 이름 순위까지 있다.

줄 세우기는 대상을 패턴화하는 사고방식의 일종이다. 인간은 복잡하고

“  
순위를 발표하는 데는 한 줄이면 충분하지만 문제를 지적하자면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양한 변수로 가득한 세상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사한 것들을 한 데 묶고 다른 것들을 구분 지어 우선순위에 차등을 매기는 방식을 사용한다. 대상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파악한 뒤에 판단을 내리자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이란 크고 작은 선택으로 빠르게 돌아차 있다. 오늘부터 모든 선택에 앞서 심오한 고찰의 과정

을 거치려고 한다면 다음 식사 메뉴를 선택하기도 전에 굶어 죽을 것이다. 줄 세우기가 그토록 인기 있는 이유는 결국 판단의 참고자료가 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줄 세우기를 좋아하는 만큼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일렬 순위평가는 사실 예정된 히트상품이나 마찬가지였을 테다.

문제는 실제 세상은 순위표에 나와 있는 간결한 숫자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곳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대학이 전국에서 몇 위라고 말하는 데는 단 한 줄이면 충분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순위를 매기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려면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저녁에 어떤 영화를 볼지 고르러 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끝까지 참고 들어줄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결국 언론사 대학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매번 같은 양상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대학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의심스럽고 불편한 시선으로 그 표를 바라보고, 더 이상 주목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해 보지만 ‘올해 당신이 속한 어느 학교는 전국 몇 위’라는 한 문장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위력적이고 매력적이다.